

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5 호

국회 사무처

2016년9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정치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2
- 국무위원(문화체육관광 조윤선·농림축산식품 김재수·환경 조경규) 인사 6
- 1. 정치에 관한 질문 6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질문 순서에 앞서 잠시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주 시민 여러분과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여진으로 추가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원전 등 위험시설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진을 비롯한 안전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을 활용하여 세 분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여러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는 우리 국회의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외교일정이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저와 3당 원내대표는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정치 지도자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3당 원내대표 여러분의 초당적 외교 행보가 빛났다는 점입니다. 양국 의회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핵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함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유무역

신장에 양국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세 분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세 분 원내대표단이 보여 준 진정성 있는 협치에 많은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차제에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국회가 명실상부한 의원외교의 주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여야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0시11분)

○의장 정세균 그러면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겠지만 제가 만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를 만나 봐도 한 목소리로 ‘먹고살기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농민들도 쌀값 폭락으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다 북핵 위협과 지진 공포가 추석 밥상에 올랐습니다.

누적된 불신에 불안이 더해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만 북핵, 불평등, 지진을 포함한 환경 위기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임을 절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경주와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살아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을 기초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무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 진흥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제안이 더 과격합니까? 어느 길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40년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 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핵 버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시나리오에 해피엔딩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불사와 같은 과도한 흥분이 아닙니다. 전쟁 방지와 평화체제를 향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인구의 11%가 사망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핵 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정치선동입니다.

무역규모 세계 6위의 민주국가인 고립무원의 비정상 국가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저쪽이 이성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안보장사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정가에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1994년처럼 선제타격론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입니다. 한반도 공멸의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충동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북한의 군사적·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 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트랙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강압이나, 포용이나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텐시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당연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 안보 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곧 안보는 정권을 넘어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에 전적으로 협력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큰 성과가 있기를, 그래서 다음 정부가 승계하고 더 강화해 갈 긍정적 유산을 남겨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등 지난 시기 보수와 진보가 함께 쌓아 온 대북 정책에서 이탈했습니다.

정의당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외교 안보전략에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또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진정 야당의 협력을 바라고 계신 겁니까?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행하게도 북핵만이 대한민국에 당면한 위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불평등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각 당 대표님들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외친 얘기가 바로 격차 해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구체적 실천도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열아홉 살 꽃다운 청년의 죽음에 온 사회가 전율했습니다. 여야 각 당에서 각종 법안과 대책을 쏟아 내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구의역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붕괴되어서 죽고, 조선소에서 물에 빠져 죽고 떨어져 죽습니다. 지하철 발판을 철거하다 깔려 죽고, 야간작업 중에 고속열차에 치어 죽고 있습니다.

민생 제일 구호가 넘쳐 나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인데 내 가족 문제라면 이렇게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장황한 말만 앞세우는 레토릭(rhetoric) 정치에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들이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절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급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 해법 간단합니다. 높은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됩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압착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 임금을 연동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기업의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합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216억 원이었습니다. 216억 원은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되어 왔습니다. 재벌기업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고통분담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러운 CEO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이 적절한 소득분배를 위해 강력히 나서 줄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불평등 해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합니다.

2015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늘 허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소득불평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상생협력' '동반성장' 등 정치적 수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정치권에 충분히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셋째,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사회복지제도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동은 0~5세부터, 청년은 19~24세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을 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노동소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수당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도 기본소득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또 작지만 농가직불금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대부분 아동, 청년,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년·노인의 기본소득은 중산층 대부분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

십조를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에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 경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수를 위한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두 손 꼭 잡아 주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불평등 해소, 복핵 대응 등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선거입니다.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정권 창출을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듯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 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슴에 묻어 두고 사는 게 나았을 것을……”, 일본군 위안부를 세상에 알렸던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아베에게 ‘그럴 수 없다’, 왜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르는 거 아닙니다. 5년짜리 한시적인 정부가 역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못하면 놔두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웁시다.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책입니다.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국무위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환경부 장관 조경규) 인사

(10시31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세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조윤선입니다.

문화 융성을 통한 국민의 행복 실현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때에 중요한 장관직에 임명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 체육 선진국, 관광 선진국으로서 국민이 행복하고 운택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이 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국회와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중대한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촌 복지를 증진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쌀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경제도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마지막으로 조경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조경규입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당면한 환경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세 분 신임 장관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몽골 인민당 여성 의원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시3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비상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북핵과 지진이라는 인재와 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과 수습은커녕 갈팡질팡 허둥졌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서로만 탓하며 모든 것을 정치 쟁점화해 버렸습니다.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힘든 때가 또 있었습니까? 민생은 어려운데 인재와 천재에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치가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전에 발생한 지진 강도가 5.8이었고 어제 발생한 지진의 강도가 4.5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추가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장관, 그러니까 평상시 지진을 대비해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재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또 평소 이웃집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피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안전처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지진에 관해서서 국민행동요령은 107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지진 관해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10개를 정해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진 전문가 도쿄대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도 7.0 이상의 지진이 곧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 비슷한 겁니다. 쓸데없는 매뉴얼이나 가상훈련 말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문제의식을 갖고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처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서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만 완성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우리나라에 매뉴얼이 총 5301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정비해서,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430개 정도로 요약해서 행동지침으로 개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검사도 하셨고 법무부장관도 하셨습니다.

현행 헌법으로 수도 이전, 모병제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병제,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만일 한다면 이것은 위헌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의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도 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입니다. 모병제는 안보 현실과 국민 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선전용으로 헌법체계마저도 아랑곳 않는 일부 지자체장의 인기 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쩍 던져 보는 그런 이슈도 아니고 또 그러서도 안 됩니다.

총리, 수도이전·모병제 주장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나서 그 과정에 자신들의 주장을 엮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 정치와 경제·사회·문

화·환경 모든 분야가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87년 헌법체계하에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이라는 것은 늘 사회현상을 뒤쫓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되고 그것이 또 법으로 개정되고 바뀌어져 가는, 특별히 헌법에 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엄격한 이런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 정권·정당의 입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런 논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경제·안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여야 막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습니다. 둘째,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 어느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셋째, 유례없는 지금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87년 서슬 시퍼런 전두환 정권도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총리,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침 내년 4월 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를 개헌 투표일로 삼아서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각별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개헌을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도리어 사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이런 총체적 문제의 결정체가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조치를 취했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월 6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도발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한마디로 효과 없었습니다.

총리,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이쯤 되면

미온적 제재나 전폭기 항공모함 한 번 왔다 시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투적인 것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자체의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우선 사드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이 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넘습니다.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 해 대는데 정쟁 때문에 언제까지 무방비로 있어야 합니까?

총리,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정치력 부재에 대해 따질 시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고두고 정부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안보 위협 앞에서조차 분열하는 현 상황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님들이 현재도 야권의 중요한 지도자로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게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6000여억 원, 노무현 정부에서 1조 5000억에 가깝게 지원했습니다.

또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김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시설은 의혹 수준이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핵이 인도는 되고 북한은 왜 안 되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핵을 만들게끔 지원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수조 원의 대북 지원을 했고 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 참석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1991년 전술핵을 모두 건어낸 이

후에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속된 말로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당근도 어지간한데 채찍도 북한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 압박 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자체 핵 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분위기나 보고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니 참 무책임하고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전광환 화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의 핵 공격 핑계를 대지만 실제 북핵은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총리, 핵 억지력 이게 도리어 우리가 갖춰야 할 때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제평화, 우리 안보를 핵 없이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핵화의 입장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조금 전에 핵 억지력 대안인 미국의 핵우산 말씀하셨는데 이 핵우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B-1B 전폭기의 한반도 전개가 기상 악화로 미루어졌습니다. 설령 출격한다면 꺾어서 한반도까지 2시간입니다.

총리, 비 다 맞은 뒤에 썩워 주면 그게 무슨 우산입니까? 2시간이면 서울은 녹아 내려 버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희생될 테고, 누구를 위한 폭격기입니까? 미국의 방어수단일 뿐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동맹의 체제가 공고합니다. B-1B가 출격을 하기로 했던 날짜를 기상 관계로 좀 미루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습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전시에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그렇게 안이한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은 전시를, 전쟁을 두고 하는 게 훈련인데 훈련이니까 2시간 늦어도 괜찮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에 때문에 작전을, 시간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태 의원 천상 총리 좀 들어가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오세요.

장관,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저 공동선언은 깨진 것입니다.

장관, 공동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깬데 우리만 지켜야 합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선언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돌아갔어야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의 거듭된 그런 핵 실험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런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시지 않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북핵 대응 선제타격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거 실행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진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렇다면 한반도에도 핵이 배치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비핵화, 비핵화는 한반도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방어를 하기 위한 다층적인 이런 노력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성태 의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깨졌습니다. 세계 유수의 핵 전문가들은 핵은 핵으로 대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자 실효적인 억제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부터 견인해 가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의 몫입니다.

총리, 핵 재배치는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 역량 강화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동맹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히 핵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핵이 사용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국가안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를 두고 정쟁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통일을 이뤄 정부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한반도 핵 재배치를 신속하게 관철시켜야 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거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보도 안보지만 민생경제 중요합니다. 정부의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 여당 의원이지만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계부채가 57%나 급증했고 규모는 125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제가 보기에 진단은 물론이고 처방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큰 우려할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지금 이제 경제 살리고 또 주택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채무상환 능력 때문입니다. 그걸 상실했다는 거지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란색이 저소득자이고 흰색이 고소득자인데 파란색은 먹고살기 위해, 흰색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리고 있습니다.

총리, 당장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실질가계소득 증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실제……

○김성태 의원 그리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정부도 특히 어려운 분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두 번째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입니다.

90년대 법인과 개인의 총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법인은 증가율이 2배나 됐고 그에 반해 개인은 절반 이하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은 돈을 벌고 있는데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총리, 정부가 경제 위기 때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가 산다며 기업들을 지원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된 것 아닙니까?

총리, 이제는 가계소득 정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근본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희생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만약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의 실질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산업이나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등의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소득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총체적 위기입니다. 북핵 문제부터 가계부채, 사회 양극화까지 난맥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근본 없는 인기영합주의와 한탕주의에 기댄 편 가르기에 익숙한 우리의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박한 정치는 나라를 망칩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최소한 총체적 위기 앞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여야가 국민들 앞에 먼저 힘을 합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강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 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3무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지진은 아예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알림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세 시간이 지나서야 원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인 어제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재난문자는 여전히 12분 후에 발송되었고 국민안전처 서버는 또다시 마비되었습니다. 12일 첫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서버 용량도 늘렸고 재난문자도 3분 안에 발송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지진 대비 매뉴얼은 2008년도 11월 달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자부를 포함한 16개 중앙부처에 실무 매뉴얼이 있고 235개 지자체, 211개 군부대까지 행동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기능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뉴얼은 계속 변경되고 고쳐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8년도 2.0 이상 지진이 관측된 이후에 제일 큰 지진이 났는데……

○원혜영 의원 아니, 결론만……

이번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의원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갖추었는데 약간의 보완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를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매뉴얼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8 규모가 7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5월 27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작성한 범정부 지진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기경보체계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이번에 3분 이내에 발송하도록 태세를 갖췄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10분이 지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그것은 10분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기상청에서 저희 국민안전처에 3~5분 후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1분 40초, 1분 50초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해지니까 5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해야지 단계를 자꾸 거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고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되어야지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지요. 저희들도 지진감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건 정밀하고 저희들은 건물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 마는 기상청에서 온 걸 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야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진감지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계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기경보체계를 다시 구축을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5초 이내에 경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원혜영 의원 우리도 이 정도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갖추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

엇인지 또 그런 수준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일본에서는 지금 10초를 하고 있는데 100km를 갔다면…… 지진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P파가 있고 S파가 있습니다. P파는 초속 7km로 움직이고 S파는 4km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P파는 피해가 별로 없고 S파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할 때 인공지진은 P파는 있지만 S파가 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km라고 그러면 25초 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100km 안에 있는 데는. 그래서 일본은 10초 이내에 그것을 해 줘야지만 15초 동안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을 기상청이나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번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어제 지진은 여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전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여진이라고 기상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원혜영 의원** 한반도에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전문가들은 그 6.5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혜영 의원** 소수 의견이라도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지진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떡하든지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를 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혜영 의원**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가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안전처장관께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4개월 전에 5월 달에 그동안의 지진 대책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40%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시설들도 많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번 지진 결과를 보면 아직도 더 보완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단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해야 될 곳이 한 400군데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난번에 점검을 했고 지금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더 확장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의 안전대책 중에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저는 특별히 이런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내진설계율은 33%에 불과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난 시 대피장소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마저도 내진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지진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층대로 볼 때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이번 지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급적 빨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국기 문란이라는 권위주의적 용어를 동원해서 사태를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대통령 눈에만 보이는 국기 문란이 아니라 온 국민의 눈에 보이는 국정 문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정 문란의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뻔한 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 실세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 존재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기용하면 될 일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날날이 털어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간 검찰이 정작 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은 문고리조차 잡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녕 이 나라는 법 위에 문고리가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본말이 전도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특별감찰관제도까지 무력화시켜 가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검찰 조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법과 상식에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도 법무부장관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도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검찰을 관할하고 통괄하고 거기 지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래 검찰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를테면 의원님 말씀같이 현직을 갖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고검장이 팀장을 맡는 이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한번 수사 결과를, 특별수사의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 원칙대로 수사하면 그 원칙대로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수사 결과는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원혜영 의원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수사에 관해서는, 물론 사후적인 그런 보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더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수사팀에게 검찰총장이 '나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문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 우 수석의 경질을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은 제가 인사에 관해서 얘기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혜영 의원 총리더러 경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이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10.7%가 감소했습니다. 103만 원이던 가계소득이 92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치명적인 서민 증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재산세 총액은 9.5조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로 서민들에게 거두게 될 담뱃세가 무려 12.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서민 증세 대신 부자 증세와 누진세율 합리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이런 조세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니고 또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올라가게 하고 그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잘 나누어져서 우리의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또 민생이 안정을 이루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특히 조세 정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불행하게도 그 최악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더니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후보 시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해 놓고 막상 복지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받을 뻔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더니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이행 완료된 공약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말과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정치는 5년 단임제에 기인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꾸준히 개헌을 주장해 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개헌 공약을 이행할 것을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 공약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들을 140개 국정과제로 정리를 해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9건밖에 공약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마는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0년 전인 2006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개헌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7년 체제는 독재정권 타도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목표로 한 시민항쟁의 위대한 승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정치를 낳았습니다.

내년이면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합니다. 87년 헌법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어느덧 수명을 다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낡고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과감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수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지도자 1인의 역량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정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아렌트 레이프 하르트는 갈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해답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개헌은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지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내년 전반기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마치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양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헌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갑시다.

19대 국회에서는 개헌안 발의선이 넘는 154명의 의원이 개헌 추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개헌안 의결정족수에 육박하는 188명의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88명의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 하루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책임 있게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수립·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원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을 출신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은 이제 계속되는 지진의 공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계속되는 이번 지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

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악화 일로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과 동북아 균형 외교의 실종, 연이어 터지는 기업·검찰·언론의 부패 카르텔, 이것이 2016년 9월 현재 박근혜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에 불과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의 대정부질의가 대통령의 귀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 개혁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 법질서를 담당하는 사정기관의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는 업무 처리와 공직 생활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 당사자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승복할 것이고, 그래야 검찰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잇단 검사들의 비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된 검사들의 주요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 김영광 전 검사 사건부터 최근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또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그렇지요? 2006년도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에 김영광 전 검사가 연루되었을 때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어찌 남의 허물을 밝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전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금품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한상대 전 총장도 사과했고 사퇴까지 했습니다. 2014년 김진태 전 총장도 특임검사로 김광준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장관님과 김수남 총장님께서도 최근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사과하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조배숙 의원** 검사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과가 계속되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감사의 비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감사장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형준 부장검사가 곧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장관님, 사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책임지고 장관직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의혹 전반에 관하여 철저하게 수사 또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그러면 지켜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켜봐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아니,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엄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자, 감찰은 비위 사실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내부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교육을 하겠다……

장관님,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검찰에서는 감사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하고 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검에서 특별감찰팀을 지금 현재 구성해서 의혹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대통령께서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 각계의 의견과 지적들을 귀담아듣고, 지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렇지만 검찰에 시간을 많이 썼

습니다, 그렇지요? 개혁안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자체 개혁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공수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의 합의로 공직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기구인 특별검사 또 특별감찰관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종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의 낭비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의원** 그런데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막강한 이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기에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너무 비대해졌다,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 그리고 기소독점권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가 불과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소권의 어떤 통제 내지는 완화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것이 사건 결정의 종국적인 통일성 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도 검찰의 소추 기능에 대한 그런 견제로써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또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장관님, 그런 제도는 알겠고요.

잘하시야지요. 한두 번입니까?

저도 검찰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

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 가지 참 좋은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조배숙 의원** 지금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건 정도의 검찰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 직위를 많이 줄였습니다.

○**조배숙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파견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사에 대한 외부기관 파견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그것은 또 국가 운영 시스템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줄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이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수사와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집권 3년 동안 무려 18명의 검사가 편법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 역시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통로입니다.

청와대에 검사들이 파견됐고,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흔들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 면면을 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의 민정수석 또한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광상도 수석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홍경식 수석은 소위 박철언 팀의 일원으로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되는 시점에 홍 수석을 발탁했습니다. 뒤를 이은 김영한 수석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희망돼지저금통모금운동을 주도했던 문성근 전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고, 2010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한 주임검사였습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실 비서관 재임시절에 정윤희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만들고 민정수석에 올랐습니다. 이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 되어서 검찰 인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총리는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임명된 것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그런 현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정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런 검사 출신들을…… 검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의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민정수석으로 갔습시다마는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걱정들 때문에 일단 현직 신분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렇게, 나갔던 민정수석이 다시 또 검찰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격

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검찰은 누가 민정수석으로 왔든 또 민정수석실에 누가 가 있든 바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의원 총리께서는 그런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 검증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검찰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검사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의혹이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 누가 감히 우 수석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 수석은 임기 말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여당에서조차 사퇴론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대통령에게 우 수석 해임을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여러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찰은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친척도 구속 수사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수석이 누구든 간에 검사들이 수석에게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의원 그렇지요. 황교안 총리님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는 대

통령 밑에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십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 민심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런데도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측이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외교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또 일본에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의한 그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합의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러면 박 대통령께서도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아니, 그런 부적절한 발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소녀상 이전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양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조배숙 의원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상 문제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말끝을 흐리세요.

그다음에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경북도 홍수 피해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도 없고 또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하는 현 상황에서 지원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은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조배숙 의원** 물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 또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민간 지원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의 입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겠다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가 해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러나 눈앞에서 우리 북한 동포가 죽어 가는데 그리고 또 지금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쌀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지금 풍년이 들었는데도 기빠할 처지도 못 되고 그리고 비축미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쌀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것이 동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좀……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인도주의 차원에서 많은 민생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사용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러나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 편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또 대선 때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편중 인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탕평인사, 균형인사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8개 부처 전 현직 장관 117명 중에 전북 출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의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현직은 단 1명뿐입니다, 차관. 그리고 전현직 포함하면 4명밖에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이 대탕평인사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입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늦어지면서 특조위가 선체 인양도 못 본 채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이 돼서야 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었고 그 특조위 예산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나서야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귀책 사유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럼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려면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지금은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배숙 의원** 자, 박 대통령께서는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특조위 기간 연장은 청와대가 결심하면 됩니다. 대통령께 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조위가 이미 1년 6개월을 넘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고 또 특조위도 안전을 한 211개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또 지금 법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체 인양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총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제 권능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검찰 개혁도, 대한민국을 사람이 사는 나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 세월호 특조위 그 기간의 연장도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사용하기를 주저한다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정파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미루는 속 좁은 정치의 시대를 이제는 끝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민의에 충실한 국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멈춰진 나라를, 자꾸만 뒤로 가자는 나라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건인차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녔는데 시민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있을 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진력을 해서 핵물질 보유고를 늘려 왔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소형화해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핵 그리고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수준도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께서는 지난 9월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20여 년 이전부터 개발 진행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90년대……

○**국무총리 황교안** 예.

○**김진태 의원**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

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핵 문제는 의혹은 있으나 확증이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도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미니멈 30만, 60만부터 많게는 300만까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서 북한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그래서 1997년 탈북한 황장엽은 북한이 5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

언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그런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무역 이외에 아마 불법적인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한 것도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우리도 지원을 해 줬지요.

본 의원은 현금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총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금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 난리인데 그때 북에 송금한 것은 국회 동의 받았습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무려 5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것도 현대라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때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하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규명했고 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를 판단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태 의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을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등 북한 핵 개발 자금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오래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오래됐다고 해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려고 있는 겁니다.

1994년 5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in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 보는 영어인데 잘 들리십니까?

햇볕정책의 창시자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험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북한의 진의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잣더미가 돼 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햇볕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영구 폐기시켜야 당연한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 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지금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가오는 10월 10일 쌍십절 날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KAL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줄 이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제대로 보복·응징을 한 적 있습니까? 맨날 엄포나 놓고 호소나 하고 있으니 상대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로마시대의 베게티우스 장군이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 능력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국가의 명운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찰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수사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수사 대상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제트 전세기, 초호화 요트, 일등석 항공권 이런 접대를 받고 우호적인 글을 써 줍니다. 이러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형, 조카에 대한 친인척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항간에서는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송희영 사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송희영은 송

희영입니다. 오히려 우병우 사건으로 송희영 사건을 몰타기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건국절 문제에 관한 검토는 우리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아니, 굉장히 예들러서 답변하시는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김진태 의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임시정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는 과정에 있던 임시정부라는 점입니다.

○**김진태 의원** 충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김진태 의원** 김대중 정부도 1998년에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그 날을 건국절로 정하자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개콘' 수준 아닙니까? 총리는 과연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은 우리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 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

실에 입각한 분명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총리께서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좀 중심을 잡고 소신껏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가 운동권 선배가 준 책을 읽었는데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이 자신이 먼저 도망쳐 놓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킨 아주 비열한 인물로 묘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비분강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철이 들어 보니까 좌익운동권이 하는 말 중에 거짓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 서울이 1950년 6월 28일 적에게 함락되는데 이 대통령은 그 하루 전날 27일 피난합니다. 오히려 늦은 겁니다. 국민을 그대로 두고 혼자만 도망갔다? 그럼 그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서울에 머물다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적에게 생포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 누구의 시각입니까? 그때 이승만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적화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하는 겁니까?

이승만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고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건 이승만이 아닙니다. 적군이 서울에 진입하면 두 시간 이내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기로 사전 작전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지 않았으면 적의 탱크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말았을 겁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보셨습니까? 맥아더 장군이 중부전선을 시찰하면서 참호 속의 소년과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을 것이며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1950년 8월 14일 무초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뽑아 들고 '그럴 바에는 자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군이 평양을 함락하기 이

미 일주일 전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정황상 만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들인 김정일·김경희는 미리 만주에 피신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모든 거짓 선동을 이승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란의 위기에 있던 민족을 이끌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한미 동맹을 맺어 그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한 위대한 지도자는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것이 곧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하고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대로 오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그 어린 생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스러져 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로, 가슴기살균제로 그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될 청춘 시절을 불안스럽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당신들의 몫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을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명 든 가슴을 쓰다듬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개인소득자 3000만 명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50%에 이르는 국민들은 다 합쳐서 5.2%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산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하위 50%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불과 2%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합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은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비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재생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생활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가 생활임금을 법제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올해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2016년 현재 정부는 14개 부처가 2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몇 개월 훈련을 거쳐서 특정 직무에 계약직 일자리로 이렇게 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제도와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2조 이상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전부 통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대 청년 중에서 열악한 조건 중에서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급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불안한 삶을 타개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 중구난방의 청년 실업 대책을 통합하면 그 돈으로도 이 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부처가 중복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사업을 위한 펀딩, 그리고 실패에 대한 평가와 구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입니다.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고위직에는 최소한의 공직윤리, 직업윤리가 있거나 한 것입니까?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맞은편에는 이러한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지금 있습니다.

검찰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줄서는 검사가 아니라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진정한 검사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신설될 때까지 검찰에 관련된 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도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자신께서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또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검사장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검사를 뽑아서 범죄·비리에 대해 대응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해야 될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가 특별검사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검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 기구를 자꾸 만들게 되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고쳐서 바른 검찰로 만들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우선 총리 말씀 중에서 검사장직 선제라는 게 그냥 일반인을 뽑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위 이른바 상명하복식 이런 문화에 숙달되지 않은 그런 검사장을 주민보호자로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벌써, 이 제도 논의가 된 게 10여 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지금 하나같이 검찰의 답변은 스스로 셀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총리 잘 아실 겁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전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 작전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논의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핵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는 지난봄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즉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6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좋다면 다소 격에도 맞지 않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지

모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는 것, 이 북한 핵이 민족사의 위기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합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무장관이 그런 발언 하셨다는 건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부겸 의원** 그렇다면 무슨 선제공격론이니 북한 정권 붕괴론만 외치는 국내 분위기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대북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할 때다. 특히 지금 수재 문제는 인도적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반기문 유엔 총장께 이런 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 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도 북한에 의해서 박왕자 여사 그분을 어떻게 보면 회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또 북한이 정말 무모한 그런 핵 도발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은 원인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그렇다고 해도 박 정권 들어와서 적어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분유가 1만t가량이 남아돌아 가고 있고요. 금년에 풍년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라든가 또 의무도입량까지 하면 쌀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부겸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리셋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의 시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공화국에 살고 싶지가 않습

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7공화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7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모두 공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 권력 분점과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또 국민의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과도, 정치적·사회적 반대자와도 또 소외된 세력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고립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두루 널리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력은 짧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는 깁니다. 5년이면 끝날 임기를 가지고 긴 역사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해 주시고 야당과 소통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힘든 서민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부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 출신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추석 민심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화두는 단연 북한 핵실험과 지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의원** 하나는 인위적인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재난입니다. 이럴수록 정치권과 정부가 단합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공감합니다.

○**박명재 의원**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

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총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과 함께 핵우산이라든지 그런 대비들을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까.

혹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비핵화를 통해서 방어가 가능한 공동의 방위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추미애 대표님 등 일부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햇볕정책이 계속되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 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햇볕정책을 폈던 2006년도 북한은 사드의 '사' 자가 나오기 전에 핵 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더 집요하게 네 차례씩이나 핵실험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만하도록 해서는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북한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 개발을 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재 의원**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한다면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북핵 없으면 사드 없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후에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과 3

당 대표회담이 공동합의문 하나 없이 끝나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기를 온 국민이 기대했고 더구나 이번 회동을 전 국민과 전 세계,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론과 국력을 결집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또 국제사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단합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합하고 언론도 단합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도 3당 대표회담의 결과에 실망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늦었지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당론과 관련하여 재논의 움직임이 있는데 안보의 엄중함과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당 대표회담 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기하셨고요, 추미애 대표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다고 하시면서 정부가 제재와 협상 중 제재에만 치중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셨는데 총리님,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내외에 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돕겠다는 평화 공존 정책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안보를 토대로 해서 남북대화가 평화적으로 진전돼 나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도대체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노하우가 무엇이며 그 노하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어져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한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 실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의 발사를 3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나 제재 국면을 다룰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 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무장을 용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의원 그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박명재 의원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 어제 여진으로 우리나라 어디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 지진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매우 미흡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님, 지진 예측과 진단기술의 향상, 내진 기준의 강화 등 기술적인 문제, 법령, 제도, 특히 국민의 대피훈련, 국민 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국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 지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난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알림문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미리 예보는 못 하더라도 통보는 즉시 해서 국민이 더 이상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지진사태가 생기기 이전에 저희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 장관들이 안전관계장관회의도 하고 이래서 사전 대비를 해 나가는데 이 지진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서서 금년 5월 달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진 대책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등의 지진 사태에 비추어 보니 그때 마련한 안들 중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한 이런 시스템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경주를 둘러보셨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가 봤습니다.

○**박명재 의원**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원전 말씀입니다—국무총리께서 직접 기자회견 내지는 담화라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혹시 내년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이 1038억인데 내년에는 2094억을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명재 의원** 어떻게 충분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개선하는 문제,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하지만 민간 건물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

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상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을 만든 것인데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전이 안 지켜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큰 문제입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대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중앙기관 시설들의 내진설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보다는 더 많이 보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시급하게 더 많은 내진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과 잘 상의해 가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또한 걱정입니다. 글로벌 재보험사 영국 로이즈 분석에 의하면 서울이 세계 301개 주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선심성 수당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재난취약도시 서울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 대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에 우리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정기국회 벽두에 3당 대표께서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대립과 갈등의 패권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3당 대표 공히 나라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협

치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세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종래와는 다른 소감이나 느낌, 기대 같은 것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3당 대표께서 일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협치를 말씀을 하신 점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 여야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 실현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4대 노동 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당에 대한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세 대표님들이 공히 언급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며칠 전 여야 18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 시기에 개헌 논의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를 되살리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안보 문제에 대처하고 하는 이런 시급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개헌 논의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 또 아이디어들을 모아 가는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다면 개헌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개헌을 정부가 주도할 계획이나 연구나 준비를 위한 기구나 전담인력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앞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헌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재 의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개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그러면 그 시기는요?

○**국무총리 황교안**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교육제도나 사회 현실상 선거연령 인하가 투표율 제고 등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선거연령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선거 연령과 성년 연령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이성적·합리적 사고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고 이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교육현장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 확대를 단순히 정치공학적, 손익계산적 유풍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모병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여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이 문제가 청년 실업, 병역비리,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공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총리님 정부에서 지금 이 모병제에 대한 공론화나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논란의 초기에 정부의 확고하고도 정밀한 논리와 입장으로 이 모병제 문제가 새로운 국민 갈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안보는 안보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법 시행을 둘러싼 혼란과 불안,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큰 틀에서 법 시행을 추진하고 지켜보면서 앞으로 불거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에 후속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입장과 정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여망을 반영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지 철저히 잘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가능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보완책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로 눈을 돌려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정현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을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신랄한 반성과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70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고자 국회 내에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총리님, 지금의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냉엄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재정비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주도했던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과거에 가졌던 열정과 헌신과 자긍심과 보람 모두를 느끼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성취감을 잃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명이 넘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도 70년의 세월이 흐른 현 공직사회와 정부의 기능과 조직, 정부의 운영시스템, 지방분권 등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전면적인 총정리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4대 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로 공공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개혁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프더라도 우리가 고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고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 사람들을 찾아서 포상하고 격려하는 이런 방안도 병행을 해서 공직자 사회의 변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수술, 정리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꼭 총리님 재임 시에 시작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언급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 지구촌 물류 대란을 초래하고도 자기 뒤편을 챙기는 기업인, 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갑질하는 공무원, 스승을 폭행하는 학생, 학생을 성 유린한 교사, 마약을 복용하는 의사,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군인, 자식을 학대 살해하는 부모, 부모를 둔기로 살해하는 자식……

급기야는 우리 사회 법질서 유지와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이른바 법조 3륜, 판사·검사·변호사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의 총수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리님,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정권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과 공직자와 기업인과 군인, 교사와 의사, 직업인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도 건강한 시민의식, 직업의식, 책임의식, 공인의식, 직업윤리관 등이 뿌리째 흔들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기본과 가치, 도덕과 양심 그리고 정의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까? 방금 마지막 질문……

○**박명재 의원** 이 모든 사회적 현상, 직업의식, 공인의식, 윤리의식이 사라지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단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부분부분들을 충실하게 다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가 바른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히지 못하면, 법질서가 바로잡히지 못하면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협업·협치 하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 지속 발전을 기약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직사회가 바로 되고 그것이 또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 가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정말 심각한 그런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문제이고 교육이 해법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8년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한 말을 함께 보시지요.

‘내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깨달은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미국의 모든 국내 문제 해결은 결국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제 문제 해결도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부재, 교육 빈곤, 교육 빈사의 문제입니다. 교양의 뿌리를 형성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지식과 품성의 줄기를 형성하는 학교교육, 인격과 경험의 열매를 공유하는 사회교육,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냉정히 현실을 돌아보시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는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네 개혁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교육 개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도덕과 양심, 정의의 사표가 될 만한 큰 교육자, 큰 중심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여러분, 아시지요? 총리님, 영국의 귀족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불란서의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지방과 중앙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국가를 우선 내세우는 국가 에타티즘(Etatism) 그리고 봉건 독일 귀족들의 용커리즘(Junkerism), 우리 과거 공직자들의 선비정신, 이 모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직업윤리, 직업의식의 확립 그리고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쇄신이 필요 합니다. 일대 국가 개조 그리고 국민정신 개혁이 절실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정치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리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 어려운 정치 가운데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간 상생과 협치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로 북핵 실험과 지진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한숨과 아픔을 보듬아 주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박용진입니다.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각오 하나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29살 나이로 첫 출마를 한 이래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러 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게 격려와 질책을 보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권과 불공정을 혁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주선 부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우병우 수석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고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걱정의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여야 대표회담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듯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인사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에 여러 의혹 제기들이 여러 사안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혹 제기 중에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고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혹 제기만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상을 밝혀서 그 진상을 토대로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 원칙,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데 공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 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진 의원** 왜 채동욱 검찰총장은 온갖 밀어붙이기 끝에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게 되는 일을 만드셨냐 이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해명을 해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저희 법무부에서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채 총장이 자진사퇴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이 기억하기로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라면서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 채동욱 총장은 찍어 내고 우병우 수석은 지켜 내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 정권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 의원** 말씀 잠깐만요.

결국 미운털 인사는 찍어 내고 예쁜 털 인사만 보호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아닌지 저는 우려스럽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총리, 우병우 수석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

혹은 진상조사, 수사 등 어떤 부분을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외에는 아무도 개입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결국 총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용진 의원** 총리, 우병우 수석을 만나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종용하신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지요.

37일 만에 수사가 시작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박용진 의원** 혹시 대통령께 우병우 수석 관련한 민심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 총리의 역할이지요. 이 역할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다른 사안을 같은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일주일 만에 지금 진상조사라고 얘기하시는 검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자세히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진 의원**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진상을 스스로……

○**박용진 의원** 진상 규명이든 검찰 지시든 하신 적은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지시 혹은 진상 규명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몇 차례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자체가 근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조치가 조치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전례 없는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례가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가 보통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심각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뭐냐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박용진 의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병우 수석 관련한 논란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진상조사의 차원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37일 만이지요?

화면 좀 띄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전국 검사들에게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저기를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 소신과 확신이 넘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메일의 ‘검찰총장’을 ‘민정수석’으로 바꾸고 ‘장관’을 ‘국무총리’로 바꿔 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메일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도 해 보셨고 현직 국무총리이신데요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어떤 것이 더 크냐고 여쭙 봤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은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아무래도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더 크겠지요. 대통령 권위 시에 총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법무부장관 때는 하셨던 이 적극적인 역할이 왜 국무총리 때는 없을까가 제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전례 없는 검찰 감찰 지시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들어가기 37일 동안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병우 수석 논란을 가벼운 사건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제가 지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스스로 조사를 해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유를 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자꾸 불거져 갔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제가 지휘하고 관할하는 총장에게 ‘당신이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이런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언론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찰보다 훨씬 더 중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 감찰 지시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우병우 수석 관련한 수사는 37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진상……

○**박용진 의원** 총리의 역할이 더 크고 권한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총리가 각 부처를 관할하게, 통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혹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했었던 역할을 하시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진 의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9월 8일 채동욱 당시 총장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9월 8일이요?

○**박용진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닙니다.

2013년 10월 1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물었을 때 9월 8일 날 만났고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용을 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 기억은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화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는 어제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박용진 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제 기억하고 반합니다.

○**박용진 의원** 확인 다시 하십시오.

어쨌든 이틀 만에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만났든 전화로든 스스로 의혹을 밝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 우병우 수석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압니다.

○**박용진 의원** 혹시 선후배로 치면 누가 선배십

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선배입니다.

○**박용진 의원** 비록 청와대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공적으로는 국무총리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선배로서 채동욱 총장에게 했듯이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공적으로 지휘하는 이런 법무부장관과 총장 관계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수석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도 아까 보여 드렸던 이메일을 검사들에게 발송하고 9월 22일은 고검장급 9명과 회동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된다, 강제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로서 민정수석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쌓여 가는 위중한 상황에 법무부장관보다 더 큰 권한과 역할이 있는 황교안 총리께서 결론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거 37일 만입니다.

총장에게 전화를 했거나 만났던 것은 이틀 만이고요, 감찰 지시를 지시하신 것은 일주일 만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부분을……

○**박용진 의원** 그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총리,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병우 수석 앞에 선 국무총리 황교안의 인사 원칙은 채동욱 검찰총장 앞에 섰었던 법무부장관 황교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께서는 눈에 띄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동욱 사태에 일주일 만에 감찰 지시를 했던 황교안 총리는 우병우 수석 사퇴 두 달 동안 침묵으로 사태 혼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 똑같은 사정기관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지만 이 정권의 태도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역시 달랐습니다. 채동욱 관련 조선일보 보도 10일 뒤에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증폭되는 의혹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는 맞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로 우병우 수석을 두둔하기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은 의혹만으로 공직자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채동욱이라는 미운털은 뽑아내고 우병우라는 예쁜 털은 지켜 내는 엇장수 인사 원칙에 다른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현 정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채동욱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대통령에게 찍힌 사람이고 우병우 수석은 정윤희 문건 사건을 잘 무마한 공으로 대통령에게 예뻐를 받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싫다시는데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라고 입 아프게 반복해서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한결같아야 하고 정권의 국정 운영도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사람 봐 가면서 달라지는 인사 원칙이 아니라 모두에게 엄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흔들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흔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흔들리는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이 정부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어제 지진 관련 재난문자 받으셨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5분 이내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기상청에서 지진이 33분에 났는데 33분 후에 저희 국민안전처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조기경보가 있습니다, 5.0 넘는 것은. 그것이 4.5라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는 한 5분 내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은 정확히……

○박용진 의원 장관님께서만 특별히 문자를 그렇게 빨리 받게 된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습시다, 보낸 데에는.

○박용진 의원 다른 국민들은 2시간 뒤에 받았고요 저는 못 받았습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박용진 의원 (고개를 끄덕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시는 게 문자메시지가 늦게 되어서 대개 8분 정도 걸렸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기상청에서 저희 국민안전처에 보내는 데 기계적으로 3~5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내는 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분 40초에 첫 번째 보냈고, 두 번째 1분 40초, 그다음에 5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습시다.

○박용진 의원 못 받은 국민들이나 2시간, 3시간 뒤에 받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 못 받은 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박용진 의원 밤늦게까지 받은 국민들한테 조금 미안하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보낼 때 CBS는 SKT, 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그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100% 저희들이 보내는 걸 받아들이 수가 있는데 SKT하고 KT는 1000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넘으니까 그 용량 넘은 것은 받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회의를 해서 그것을 LG유플러스처럼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도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CBS는 2008년도 12월 달에서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달에 구마토 지진이 나고 나서 저희 나라에서도 한 4000여 건의, 한 3904건의 유감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지진에 대한 방재대책을 세울 때 우리도 CBS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긴 설명 듣는 사이에 국민들이 더 화가 많을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래도 장관님은 5분 만에 받으셨잖아요. 못 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요 언론사 속보로 받았습시다. 저는 많이 아쉽습시다.

장관님께서서는 혹시 국민안전처가 국민스팸짜증처, 국민뒷북처 그렇게 국민 조롱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민안전처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받고 있는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사전적인 예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찌 보면 문자나 보내고 뒷북이나 치는 이런 부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 대한 법을 확인해 보면 사전예방활동도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시다.

○박용진 의원 혹시 지진과 관련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하신 게 뭐가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7일부로 종합대책을 세웠고……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나라 2016년도에 지진 관련 예산이 1039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소위 말해서 지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는 예산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예산 8100만 원을 빼면 R&D 2억 4000만 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서 올해는 56억 원이 현재 정부안이 되어서 국회에 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예산 말고요 사전예방

활동 하신 게 뭐가 있냐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27일 날……

○**박용진 의원** 계획 세우신 거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박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원전을 얘기하시는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구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용진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요, 원전도 물론 위험합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다른 아닌 학교입니다.

2008년에 중국 쓰촨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희생자가 6만 8700명이고요 1만 79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학생들 희생자 숫자가 무려 5335명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른바 두부건물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될 만큼 허약하게 지어진 허술한 건물 탓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낡은 건물들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희생된 겁니다.

2005년 10월에 있었던 파키스탄 북부 대지진, 7000개의 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1만 70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이탈리아·알제리·모로코·터키 지진 때도 학교 건물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건물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은 지 50년에 육박하는 초등학교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화계초등학교가 1967년 그리고 송천초등학교가 1966년, 미양초등학교가 1971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체 학교 건물 수가 6967개인데 이 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713개로 전체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무려 14%나 차지하고 있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학교가, 50년 가까이 된 학교, 벽돌로 지은 학교 건물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이 지금 된 것은 40.93%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는 22.62%밖에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러나 원자력이나 공항 같은 데는 대개 95%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의 교육부 예산이 이 지진 내진하는 게 한 60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은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잘 협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내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전처장관께서는 노후 건물 신축, 안전조치, 선제적 예방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끔찍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991년에 건축한 서초구청 청사가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계획이 있고요. 1978년에 건축한 용산구청 건물은 2010년에 1522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어른들과 공무원은 새로 지은 초호화 건물에서 일하고 우리 아이들은 50년 넘은 낡은 위험한 건물에 방치해 놓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와 또 관계부처 다른 장관들하고 협의 잘 하셔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빨리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앞서 동료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현행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선관위에서 관련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인하할 경우에 투표율 제고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치관계법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박용진 의원 OECD 국가 중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전선거운동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브라질 이런 몇 나라에서 사전선거운동 그 제도와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도를 또 정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전선거운동 제한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없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많은 나라 대부분의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최근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판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박용진 의원 어떤 내용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보다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지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나 수사 관련해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단속으로 인해서 선거활동 및 정치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선거운동 조항은요 범법자를 지나치게 양산하는 조항, 어찌 보면 돈은 묶고 입은 풀자고 했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또 선거 분위기가 초반부터 혼탁되고 과열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 보장 측면과 불법선거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찌 보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 금지 조항에 대한 삭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국민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일에 우리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사전선거운동 폐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역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직무상 활동 등을 통해서 사실상 장기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 신인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줄 새 인물이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의 인지도를 알릴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20대 국회에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폭넓은 선택권을 열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의 개정을 이루어 내고 한국 정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사드 배치 하나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당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안보 위기에 초당적 대처를 하자는 대통령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반대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 기능을 제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국익보다 당리당락을 앞세우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정치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임하면서 여야를 떠나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개혁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다가 기한이 차면 적당히 미봉하던 관례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에는 끝까지 정치를 개혁해 냅시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일부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원혜영 의원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무책임 정치의 사례로 보육예산 또 역사교과서 문제를 드셨는데 이게 적절한 말씀입니까?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보육예산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어린아이들의 교육 범위를 넓히고 연령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에는 명백하게 지방자치, 지방교육청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도, 학생들은 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사용되었던 역사교과서에 많은 오류와 편향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논란보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통일된 그리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편찬 체계를 저희들이 개선해서 균형 있는 필진들이 균형을 가지고 종합적인 여러 단계의 검정을 거쳐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표고 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의원** 앞서 박용진 의원이 우병우 수석과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인사 원칙과 법령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중 잣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두 사안은 아까 박 의원님 말씀에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진상조사를 한 것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에서 스스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니까 진상을 밝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그런 진상조사 지시를 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 우 수석 문제는 청와대 내 비서실에 속해 있는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더더구나 수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사안은 사안 자체가 다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도 달랐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사안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우 의원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해서 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987년 헌법이 현재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여러 각계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총리께서는 현재의 어떤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현재 헌법 개정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헌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저도 국민 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개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생이 어렵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남북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안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단계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개헌에 관한 논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5년 단임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근시안적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전략을 깊게 연구하기가 어렵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5년 단임제가 시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지를 잘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5년 단임제가 좋은지 아니면 4년 중임제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겠습니까라는 북핵 문제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을 하다가 그 뒤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강경 일변도로 갔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대북 정책이 또 북핵 대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거든요.

'북핵 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이 5년 단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재를 할 단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박찬우 의원 단임제가 초기 한 3~4년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레임덕이 온다, 또 중간에 중간 선거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는 국정 수행이 원활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결국 이 헌법체제가 국정을 불안하게 하는 한 요소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부도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준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제재에 실패한 원인을 밝히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위기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과 대화, 강경한 어떤 제재도 중요하지만 협상과 대화가 양면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앞세우면서 정작 해야 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비 강화에 대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북핵, 북한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다,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핵 개발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지금 핵탄두를 소량화·경량화·다중화 하고 또 이 운반체인 미사일도 상당한 성능을 이미 완성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까지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결국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시급하고 또 정말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우 의원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이게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의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서 바꿔 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략

이 실패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핵 실전배치가 지금 임박했다면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동맹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동맹국의 핵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든지,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그 방위자산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배치 계획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의원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정책을 저해하는 측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의원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방중기계획, 자료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226조에 상당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한 6조 원 정도가 축소된 그런 내용인데요.

북핵 위기가…… 5차 핵실험 하기 전에 만들어진 중기계획인데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방예산을 할 수 있는 대로 증액해서 그런 군비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GDP 대비해서 한 2.4%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6.2%, 러시아가 4.18%, 미국이 3.33%입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 GDP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국방예산도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예산

대비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평상시 예산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평시를 전제로 한 국방예산을 수정예산을 제출해서라도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을 지금 4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복지예산이 3분의 1입니다, 130조. 나머지 부분들을 교육과 국방 또 SOC, 여러 분야에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방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보가 엄중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용한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증액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부처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흡수가 됐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박찬우 의원** 지금 북한의 핵 도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처를 하려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께서 안행부차관님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차관급으로 해서 한 108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는 1개 국으로 해서 지금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복원 계획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대통령께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국민안전처의 상황실은 세 가지의 중대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핵, 두 번째는 태풍, 세 번째는 지

진, 이 중대본 3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은 시코쿠를 지나서 아마 오늘 저녁쯤 제가 북귀하게 되면 가동을 중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북핵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대본을 가동해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든지 중요 정부 부처에서는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상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의 재난 대응 기능, 지진 대비 기능, 이런 것 수행하시면서 전쟁 대비 기능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체제 가지는 전쟁 소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전시정부로 전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각 부처가, 공무원들이 전시 전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보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을지연습 할 때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교육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외부 관찰관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고, 을지연습 실시한 이후에 미흡하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재훈련을 하도록 규정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전쟁 대비 계획인 총무계획이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평시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전쟁 대비 계획인 총무계획을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박찬우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지금 온 나라가 대단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 기능이 취약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경보체계 구축하는 것이라든지 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시급하게 보강하고 또 원자력발전소, 이런 기반시설

에 대한 안전 점검하고 보장하는 일 이게 굉장히 시급한데, 추가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재난대응체계 문제는 사실 매뉴얼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교육 훈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도 선원 또 인솔한 교사, 학생, 누구도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키웠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재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전교육, 대응·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훈련을 많이 하면 그만큼 피를 덜 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도 그렇고 빈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위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저희들도 부실했고 또 거기에 관심들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진을 포함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서 정부3.0 주무 장관이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의원** 각 분야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정부3.0의 중요한 기본 방향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핵심 가치 자체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정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정부3.0의 기본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 가치가 국정 운영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북핵 대처나 이번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관련 부처 간에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여러 가지 이야기, 평가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부3.0의 기본 가치에 맞게 각 부처 간에 긴밀하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교환하면서 가능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저는 벽을 허무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또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는 부서 간의 벽을 또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나 의식을 바꾸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사·조직·예산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와 민간 간에도 함께 협업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협업이라는 것이 문화뿐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 공감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가장 전형적인 사업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같이 고용과 복지 사업들을 하나의 지붕 아래 하나의 사무실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 40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미 가동 중에 있고, 그것을 내년까지 한 6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화학재난 방재종합센터를 저희가 이미 지난해부터 하나의 협업 모델로 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제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부처 간의 또 부서 간의,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협업해서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합동방재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은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국정 각 분야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부처나 기관 간에 이와 같은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디스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갈등 관리에서도 정부3.0의 핵심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결정을 하고 뒤에 갈등이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서로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면 그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그와 같이 정책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 절차법에도 청문제도라든가 행정예고제도라든가 전자적 공론투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운영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사전에 해소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방금 전자적 공론투표 말씀하셨는데요, 공론투표가 뭐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공론투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공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토의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 공론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의원 장관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안을 놓고 국론 분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론 분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안을 다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모든 문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아까 행자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공론투표제도를 법제화해서 국론 분열을 겪기보다는 일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론 분열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론화 과정과 또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 예를 들어서 공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공론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과의 상충 가능성 또 대의민주주의 원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의원 이번에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법정관리가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뒷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박찬우 의원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법정관리가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결정할 단계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그 결정 과정에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가 소외됐다 또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정책 결정 과정에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결정하고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팀장으로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범부처적인 대응 체계들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조조정의 추진과 또 특히 한진해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정관리 결정 이후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범부처적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문 시위꾼들이 갈등 현장에 항상 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불법 전문 시위꾼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시스템도 만들고 또 수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집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불법 전문 시위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노력이 계속되면 결국 이런 불법 전문 시위꾼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지 않겠나, 그런 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2019년이 삼일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박찬우 의원** 2019년이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의원** 100주년 사업을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독립기념관 일대에 삼일만세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고 또 임시정부 청사를 그 부근에다가 복원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정말 큰일을 그르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총력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가 본연의 역

할과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심기일전하여 위기 극복에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조응천 의원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박수를 받는 국정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지 권력의 발호에 맞서다가 역부족으로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국민들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을로서 살다가 야당을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호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굴곡진 역정만큼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또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 관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종합을 하자면 내 편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국사범으로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이중 잣대야말로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기문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표를 보면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제도이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든 누구든 신분 고하를 불문

하고 비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부당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하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지난 8월 29일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던 특별감찰관이 연가 20일을 다 쓰고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제부터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도대체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욕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사표 수리하면 우 수석하고 거취가 비교돼서 그런 겁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제 생각에는 사실이 무엇이나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 사실 규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수천 부장판사, 김형준 부장검사. 가히 올해 2016년은 검란(檢亂)의 해, 법란(法亂)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불과 반년 동안 범조비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터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 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 초유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 최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 꼭 그렇게 초유라고 말하는 건 어렵겠지만……

○**조응천 의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된 적이 저는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피의자를 구타해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김정길 장관 그리고 이명재 검찰총장 동반 사퇴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스캔들이 터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법무부장관이나 총장이 사의 표명하신적,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총리께서는 총장이나 장관,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검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총장의 사과가 여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게 최근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화면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도 감찰 강화, 2013년도 감찰본부 확대 개편, 2016년도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그런데 본 의원은 저 자신도 검찰 출신이지만 감찰위원회, 감찰본부, 특임검사, 이름만 바뀌 가지고 국민을 눈속임하고 매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 조직이 그렇게 알파카게 눈가림하고 지금 문제만 넘어가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발되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 제도가 지금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

지 제도들을 통해서 검찰이 잘못된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의원**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랜저검사·벤츠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했다가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하니까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임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준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사건을 낚아채서 또 특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김형준 부장검사, 경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기각하고 사건 갖고 와라, 빼앗아 갔습니다.

정말 덮어 주기에 급급하고 들통 나면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자체 개혁하겠다 이 말을 믿어 줄 국민이 있을까, 검찰의 자발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이나, 구조적인 모순이나, 비리나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이 두 분만 놓고 보면 주식을 주고 해외여행 경비 대 주고 친척 일감 주고 또 개인사 뒤치다꺼리—말하기 힘든—그런 것까지 다 해 줬어요.

이게 검사가 정말 무서운 존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면 왜 뒤치다꺼리를 다 해 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찰의 제도에 의한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또 나쁘게 사용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저도 검찰에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정수석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은커녕 5년 내내 한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고검장이라고 한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단 1인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지금 검찰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검찰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검사, 특별검사제도나 또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도가 고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적용을 해서 검찰이 다른 조직으로서 바로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일단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 잠시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 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분야로 펼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여러 번 회자가 된 건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특별수사팀의 수사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다. 수사팀, 특별수사팀 수사 의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화면의 압수수색한 장면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일체 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또 보시지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천신일·담철곤 회장과 또 (주)정강에 대한 의혹입니다. (주)정강에 대한 의혹 사항들 제가 보기에 천신일 회장이나 담철곤 회장이 기소된 혐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천 회장에 대해서는 우 수석이 직접 수사를 맡았다는데 남은 이렇게 하고 대인추상 지기 춘풍(待人秋霜 持己春風), 과연 우 수석의 이런 자세가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을 하고 또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하였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한때 31위였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지금 70위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한다면 취재원이 보호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기자의 통화에 응하겠습니까? 이것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도 수사의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조선일보 기자의 카톡 내용이 자신도 모르게 유출이 됐습니다.

MBC 쪽 지금 수사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쪽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중요 사건은 장관에게 무조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국과 청와대 파견검사 간에는 수시로 전화하라고 핫라인이 있지요? 장관도 모르시는 사이에 우 수석한테 이 사건이 보고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인사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힘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

거나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보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 화면 한번 또 봐 주시고요.

우 수석 사건은 제2항, 특검 임명 요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총리께서는 자꾸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 특검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 화면 다시 한 번 더요.

이것은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하소연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못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조응천 의원**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소위 3인방과 가까운 법무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가 3인방의 인사 청탁 심부름을 하고 이 정부 법무부장관들도 그 부장만 따로 불러 가지고 청와대 기류를 전해 듣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정부 법무부장관은 지금 장관님 또 저기 앉아 계신 총리, 딱 두 분이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응천 의원** 알겠습니다. 국감 때 계속 여쭙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암행어사 시절 임금의 측근들을 처벌해 달라고 올린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단죄할 때는 마땅히 임금의 최측근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에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수석,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사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우 수석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도리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 화면 한번 좀 봐 주시지요.

우 수석은 정무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정무직이 정무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우 수석에 대해서 면책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과연 정무직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발언의 당부나 또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작년 말과 금년 초 2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오늘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응천 의원** 뿐만 아니라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 들은 것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조응천 의원** 과거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 가지고 대통령께 전해 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돼 있고, 또 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가지고 전해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가 단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제가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우 수석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데도 도저히 수궁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합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왜 그런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만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조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에게는 역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역린이라는 게 있다면 소신은 사라지고 충언은 국기문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별거벗은 임금님 세상으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정권의 실패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때문도 관료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라도 있다면 꼭 성공하는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과 나라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 고언을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른 길을 간다면 야당도 국민과 함께 옆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조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도 오늘로 110여 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독선과 아집의 덫에 걸린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은 20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칠 뿐 소통은 불통, 국정은 먹통, 경제는 갱통으로 국민의 가슴은 분통이 터지고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 정권을 다섯 가지 고통을 주는 정권이라고 해서 '5통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통 정권, 먹통정권, 갱통 정권, 분통 정권, 고통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68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묵살한 채 검찰의 셀프 개혁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인양하지도 않은 채 특조위 활동 연장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푸는 게 순리인 안보 문제,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이를 매듭짓자는 다수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협치와 상생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혹시 이런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이용주 의원 그다음 자료화면에 보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추석 귀향길 KTX 열차 안에서 우연히 본 책자입니다. 보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진 책자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귀향객을 대상으로 열차라든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배포한 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을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논쟁 중인 사안이 많은데 이것을 업적이라고 홍보하고 홍보 자료로 만들어서 열차에 배치하는 것은 5공 시절이나 유신 시절 이런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 책자 비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런 정책들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거짓 내용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 24년 만에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그 결과 책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사죄 표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책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이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관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일본의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방금 총리께서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어떤 내용으로 사죄 표명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여해서 위안부분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관해서 아베 총리가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이와 같은 홍보 자료들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국민들은 이런 자료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느냐?’ ‘위안부 협상도, 노동 개혁도, 사드 배치도 여전히 논란인데 이걸 이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세금 거기다 쓰라고 낸 것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표현이라든지, 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것이,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의견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앞으로의 국정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번에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그리고 78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지진의 규모가 낮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큼니다.

이번의 지진 사태 때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먹통된 사실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어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먹통이 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안전처가 1년 반쯤 전에 만들어져서 여러, 지금 없던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그런 시스템들도 제가 알기로는 새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용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큰 지진이 생기니까 일시에 많은 접속자들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불안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것이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주 의원**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지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방폐장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내 원전 일부가 가동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월성에 아마 네 기가 수동 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전 안전관리 차원의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수동 정지한 것입니다.

○**이용주 의원**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3시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4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한수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약 4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으로 원전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인데 4시간이라는 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 글로벌 기준으로는 원전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가동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원전 사태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3시간 내에 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일찍 정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충분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안전 점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뉴얼을 작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총리, 이번 긴급 재난 발생 시 원전 가동 중단을 누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 발전소의 팀장의 재량에 따라서 가동 중단이 결정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들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민의 안전에 중차대한 결정인데 발전소 팀장이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팀장이 최종적으로 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간에 지금 여러 차례 보고도 듣고 또 계획도 세워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현재 1차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원전에 관해서는……

○이용주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러면 언제쯤 재가동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안전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가급적 조속하게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재가동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안위가 아마 조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지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현재 몇 명이 궐석인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4명이 지금 아마 궐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5명이 아마 궐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위험 그리고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최종적인 기구인데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개의도 못 하고 안전 의결도 못 하고 있는 식물위원회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 원안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책임자를 찾는

문제도 어렵고 또 근무여건도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차제에 더 긴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최근 국회에서 원안위 위원 두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추천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내에 운전 중이거나 정비 중인 원전을 총 합하면 약 24기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번에 지진이 난,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습니까? 경주에 몇 기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부근에 10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번 지진이 경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선구조의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단층을 자극해서 추가적인 지진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우려는 언제든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 부산 지역은 원전 건설 허가 당시에도 양산단층이 비활성단층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써 양산단층이 사실상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앞으로 건설 예정 중인 원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

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2일 날 발생한 경주의 지진이 약 40분 간격으로 진도 5.1, 5.8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 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피해요?

○이용주 의원 예, 경주 지역의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피해가 저희들이 파악한 건 오늘 아침 6시까지 6030개인데 그중에서 공공시설 322개는, 문화재 60개를 포함해서 그것은 응급복구는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도 66.6%는 복구가 됐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한 109억 정도 피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그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지진 피해하고…… 지금 현재 원래 공공시설은 일주일, 사유시설은 열흘 동안 피해 조사한 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 합동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약 48명 정도 되고 더더욱 큰 건 문화재 피해도 약 6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객 감소는 물론 주변 상가가 불경기에 빠져서 관광도시 경주가 폐허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또한 4.5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피해 규모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13건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지진경보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태풍을 포함해서 풍수해는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태풍도. 그런데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일을 갖다 처리하면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진 예보,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다른 풍수해에 대비해서 더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번에 긴급재난문자 보내는 데 9분 정도 걸렸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9분, 8분, 7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지요. 지진 난 일주일 후에 했는데도 이번에도 한 8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지요.

일본은 지진알림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진 발생 후 약 1분 30초 이내에 진도 3.0 이상은 구별해서 4.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약 4초에서 20초 이내에 긴급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최대 약 49초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한 것처럼 지진이 예보가 어렵지만 발생한 후의 조치는 어떤 나라는 4초에서 20초, 그리고 49초를 넘기지 않는데 저희 나라라고 해서,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 9분이라는 것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지진경보시스템이 기상청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 3~5분이 경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3~5분 안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진 경보는 아무리 빨리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빨리 하면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이 10초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예산이라든지 여하튼 시스템 단계별 조치하는 것도 바꾸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다음, 재난문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낸 재난문자,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문자의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무슨 내용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받습니다, 똑같이.

○**이용주 의원** 그래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해당되는……

○**이용주 의원** 그 내용은 ‘지진이 발생했다. 주의해라’ 딱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해라, 어디로 대피해라, 어떤 요령을 갖춰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 ‘지진이 발생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국민들 알아서 해라, 각자도생해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난문자를 보고 어떤 국민이 ‘아,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조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 재난문자는 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120바이트, 60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60자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할 때 아예 유료로, 지금 60자는 무료로 하는 건데 유료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8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위 공수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혹시 그 법안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뭐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공수처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공수처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공수처라는 것이 새로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설치를 하면 어떤 예

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찰기관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추 또는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개 다 찬성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듣고는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찬반양론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이용주 의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랬던 한나라당조차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과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사과하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시늉을 했다가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미봉책으로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안 내놓으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며칠 자로 해 놓으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8월 29일 자엔가 발표를 대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3당 대표회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 하셨어요.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검찰이 자체 개혁을 잘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검찰의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검찰 자체에서도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심층적인 연구와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느니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의원** 예, 물론 검찰 출신인 본 의원조차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사건 언제부터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서울서부지검은 5월 18일경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써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몰랐어도 대검에서는 5월부터는 파악하고 있었겠네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대검에서 5월에 서울서부지검의 사건 첩보를 받았지만 단순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9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감찰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5월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대검에까지 보고가 된 상태인데도 9월까지 기다려서 감찰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감찰이 자체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국민들이 믿고 맡기겠습니까?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감찰이 이번에도 또 두루뭉술 넘어가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5월에는 지금과 같은 정확한 또는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진 상태가 아니고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취득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찰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감찰이나 또 법무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장관님께서서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자체 개혁안조차도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특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대검, 법무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이용주 의원**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정수석 이야기를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 수석 거취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일단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용주 의원** 우 수석이야 본인이 뭐 거취를 결정 안 하겠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런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보도 봤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문제도 같이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 중인 경우에 인사권자가 어떤 조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지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받는 사람은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을 경우에 의원면직을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혹시 우 수석도 그런 이유로 사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런 논의점들을 충분히 살피셔서 대통령께 여론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 사태 때 경험했듯이 그 현장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조급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은 정말 수준 이하였습니다. 이는 곧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 불통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과 소통을 하십시오. 국민이 손을 내미는데 발을 내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는 물질적 풍요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우수한 제도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회의 균등은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특히 의식주와 교육·의료 분야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의 사다리

제공을 통해서 그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고 또 그들의 아이들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비전이자 사회통합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결과의 평등과 격차의 축소를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보다는 기회의 평등과 빈곤의 해소를 더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가 더 친서민적이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지 위협과 심화되는 격차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불안이 점점 좌절과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이 어떤 형태로 분출되어서 우리 사회를 흔들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는 이런 민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심을 존중하는 것과 민심에 영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심에 영합해서 계층 간 갈등과 국민의 분노를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은 거부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정치는 극단주의와 극한 대립을 초래해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좌절과 분노를 국민통합과 개혁 에너지로 승화시킨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 되었고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은 역사의 패배자로 낙오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계신지요? 국민은 지금의 어려움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또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경제와 안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 또 불안감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여러 국내외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이런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4대 구조 개혁, 경제 개혁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도가 낮고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다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방향을 개혁으로 잡고 꼭 개혁을 통해서 경제가 살고 민생이 안정되는 때를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빈곤층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또 빈곤 해소를 우선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생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몇 차례의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마모가 심해서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침체 국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순환에 의한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적 처방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작년 10월 노사정위원회가 어렵게 합의한 5대 노동 개혁 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야당의 반대로 거의 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라는 안팎의 어

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급하고 중요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경제 개혁 법안들은 다수 의식을 가진 야당에 발목이 잡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기로 인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부가 져야 합니까? 국회가 지는 것입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되면 잘된 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이고 책임정치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계속 침체 상태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당초 정부의 정책 수단과 방향이 잘못되어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행하고자 했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라고 보시는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세계 각국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4대 구조 개혁을 비롯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점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의 신용도를 역대 최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도 지금 경제는 어렵지만 구조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이,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향이 잘됐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도 살고 민생도 바로잡히겠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신용도 평가를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제때 잘 통과가 되고 또 구조 개혁도 입법의 뒷받침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전제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경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고 4대 구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법 때문에 막혀서 못 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경제 살리는 개혁 법안들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종석 의원**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이 원칙이지 원칙을 타협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체성에 비추어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십시오. 그 대신 집권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견제보다는 발목 잡기, 균형보다는 국회 우위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발목 잡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경제 개혁과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을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은 적기에 필요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회와 소통하고 설명을 해서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입법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예.

아시다시피 이달 말부터 부정청탁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당한 것이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 법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돼서 소상공인, 농어촌, 골목상권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도·소매업과 식당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당업을 비롯해서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 사업자들이 고용을 조정하거나 휴·폐업을 준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가계부채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국내외 경제 사정이 이 법의 시행으로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금년 말에 심각한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비상경제 대책과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가져올 여러 가지의 파장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탁 금지법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바로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단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분야의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은 피해가 있고 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잘 살펴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탁 금지법이 지향하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제대로 성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양 측면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예, 이렇게 관찰과 모니터뿐이 아니라 급격한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비상 대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전횡과 소위 황제경영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져야 합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명의 대기업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중 6명은 이미 실형을 살았거나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와 법을 더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법을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창출 기회를 늘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의 기관투자자들과 펀드매니저들의 주주권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형 노동조합과 관료조직도 재벌 못지않은 경제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정치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켰듯이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도 이러한 경제권력의 견제와 분산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노조의 권력은 노동 개혁을 통해, 관료의 경제권력은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견제하고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은 아시다시피 민법, 형법과 함께 우리나라 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논리나 경제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경제계와 학계 등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의원안으로 발의가 되어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1997년의 외환 위기는 줄지에 당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널리 인식이 퍼져 있었고 실제로 노동과 금융 개혁 법안이 외환 위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나름의 자구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개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경제 위기를 당하

고 말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개혁 요구 조건들이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노동 개혁과 금융 개혁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은 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기라고도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이 위기입니다. 추락한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정쟁으로 기회를 놓쳐 외환 위기를 맞았고 결국 외세에 의한 개혁을 강요당했습니다.

97년의 외환 위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 위협,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심화, 가계부채 증가, 이 모든 우리가 겪는 국내외적 어려움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걸쳐 누적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쉬운 해답이 없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묘방이나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가뜰이나 어려운 국민을 달콤한 선심 공약으로 오도하지 맙시다. 포퓰리즘은 지금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이 일부 잘나가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탓하지 맙시다. 갈등과 분열은 지금의 어려움을 더 오래 가게 할 뿐입니다. 게으름과 무책임을 부추기고 혼란과 불안을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을 곤궁하게 만들 것이고 국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정부는 부강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선동정치와 포퓰리즘의 유혹을 자제하고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우리 국민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희생할 용의가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 누구나 주목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더 중요시하는 기업,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과 유착했었던 것,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 진실을 보도해야 하지만 정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 걱정했던 언론 등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러한 병폐들은 여전히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참사 등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진 관측 이래 최고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여전히 무능력했고 국민들의 불안도 여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병폐를 낱알이 밝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은 곳곳에서 가로막혔고 이제는 아예 막을 내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한다는 희망을 품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 규명이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특조위가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고 특조위는 그동안 성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였으며 특별법 해석상 이제는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

면 임기가 다 끝났고 따라서 활동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는 더 진행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특별법 제7조는 이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이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세월호 특별법 7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될 터인데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4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었던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정확한 존속기간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해석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지만 세월호 특별법과는 규정 형식이 다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부칙에 명확하게 위원들의 임기 개시일을 법 시행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명문 규정에 의해서 위원들의 임기 개시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봐서 그 기간을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장관께서는 부칙에 있는 위원의 임기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꼬리를 가지고 오히려 몸통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이라 함은 최소한 특별법 제6조가 규정한 것과 같이 17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인적 자원이 준비되고 예산이 구비된 시점일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예산 중에 하나만 없어도 위원회는 운영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례에 비추어 봤을 때 특별법에서 말하는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시

점은 결국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 예산이 배정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지원 절차라고 볼 것입니다. 이 인적·물적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만약에 본다면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활동기간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행한 위원회의 행위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맞지 않는다면 위원의 임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혹여 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위원의 임기를 늘려 주는 식으로 해야지 위원회의 활동기간 자체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말이 되는 해석 방식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어떻게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법문에는 본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말이 전도된 해석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데 특별법 6조 5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위원의 임기도 연장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 그러면 부칙에 있는 위원의 임기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다른 정부기관에 있어서 기관의 수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기관의 활동기간도 당연히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을 다른 법이나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 좋습니다.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들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도 진상 규명과 관련된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특조위와 같이 존속기간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시행일이 2000년 4월 13일로 되어 있지만 위원 임명이 마무리된 2000년 8월 28일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도 법 시행일이 2004년 9월 23일이었지만 존속기간 시작일은 그 뒤 9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31일로 삼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법 시행일 가지고 단순하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나 존속기간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돼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서 기간을 기산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다른 법들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에는 부칙 3조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들과는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주민 의원** 계속해서 부칙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시는데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부칙이 어떻게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쭙 보고 싶어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진상 규명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학적인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에 조타수가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 복원성을 상실하였던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 증축 또 과적 이런 것으로 인한 선박 복원성의 약화와 고박 불량,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그렇게 운용을 한 점 또 조타 미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법원은 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판결하면서 정부가 주장한 침몰 원인 중에 조타수의 조타 미숙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증축이나 과적 등의 선박 복원성 약화 문제

그리고 고박 불량 문제는 다 인정을 하면서 조타 미숙 부분에 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했었는데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 의견을 다른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맞습니다. 조타 미숙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계 고장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결 존중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입니다.

○**박주민 의원**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조타 미숙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된 것으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은 지금도 조타 미숙이 아주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다른 판단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안의 진상이 규명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에 대해서 법원이 견해를 달리한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검찰이 수사해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를 거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결론이지 검찰이 주장했던 공소사실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여러 원인들을 검찰은 기소했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했고 조타 미숙 부분……

○**박주민 의원** 조타 미숙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타 미숙 부분에……

○**박주민 의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 기계 고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검찰의 기소를 인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과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총 세 번 평형수의 무게를 발표했는데 가장 적었을 때와 가장 많았을 때가 무려 128t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검찰조차도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평형수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결국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조위는 강제로 종료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고, 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타 미숙 문제 때문 등에 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혐의를 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검찰의 주요한 기소 내용 중의 하나가 조타 미숙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기계 고장 등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이상 침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특조위 진상 규명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협조할 일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로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했고 또 특조위를 위해서도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물론 특조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원칙에 맞고 법에 맞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누군가는 세월호 특조위가 수백억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누군가의 말처럼 진짜 특조위가 수백억의 예산을 썼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특조위에 151억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맞습니다, 151억입니다. 이것은 특조위가 요구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의 42%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신청한 예산을 기재부가 이렇게 절반 이하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신청한 예산의 100분의 1, 10분의 1을 인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정부로서는 많은 예산 요청을 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정된 예산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61억 7000만 원인데 이 예산에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비, 종합보고서 관련 예산, 위원회 백서 발간 사업비, 자료 조사 정보관리시스템 사업비,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필수사업비, 특히 그중에서도 인양된 선체를 정밀조사하는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봤을 때 정부는 진상 규명에 대한 협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금 여러 부분 중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세월호의 원인에 관해서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많이 다뤄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그것도 여러 원인들 중에 한 가지 문제, 조타 미숙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아니니까 이게 진상 규명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지원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당국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러나 세월호 진상 규명은 중요하다, 그리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예산에 관해서는 요청했지만 반영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인력 지원에 관련된 사례들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조위에 있는 진상조사 담당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진상규명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 진상규명국장을 현재까지도 대통령은 임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선 능력이 적합하나, 그다음에 검증에는 잘 통과가 됐느냐, 또 다른 사람과 비교우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마 보통 평상시 하던 그런 인사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미 세월호 활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상규명국장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인사혁신처의 검증 절차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진상규명국장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특조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서 공무원 48명까지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 파견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29명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48명 파견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파견 안 한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를테면 검사도 정원이 2100명이면 지금 2000명이 채 안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 수급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인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인력 충원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소위 지원자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는 책임자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검토에 있어서 충분한 원하는 그런 인원들이 다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가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이런 인력 지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도 있는데요. 특별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파견된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9일 날 폭로된 해수부의 문건에는 ‘특조위가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이 문건대로 실제로 BH의 조사결정이 있자마자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사퇴 의사 표명을 했는데도요?

○**국무총리 황교안** 해수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특정 보도에는 문건 작성자의 이름까지 적시해서 보도가 됐었는데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주무 부처인 해수부에서 그 문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렇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국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처럼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가 나서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특조위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단 한번도 온전한 모습으로 구성이 완료된 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특조위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경의 세월호 공기 투입은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용 쇼였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었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을 286t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410t이 적재되어 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도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성과들이 있다는 것은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앞에서 언급한 특조위의 성과는 앞으로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장관의 위치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법무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장관님, 특조위가 지난 6월 28일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 3개월 내로 수사를 종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9월 29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발한 것도 특조위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역시 유의미하게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장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

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 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비애감이 듭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일부입니다. 이때의 대통령의 말씀과 지금의 제 마음이, 아니 많은 국민의 마음이 너무도 같다는 그 사실은 저를 아 이러니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부디 2년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께 다짐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된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뿐이며 국민들은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평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행돼서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정부와 여당·야당이 모두 다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의원(291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중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희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중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21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응 래	노 회 찬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옥	민 병 두
민 흥 철	박 경 미	박 광 운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흥 근	배 덕 광	백 재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중	소 병 훈	손 해 원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세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위 성 곤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정 미	이 중 구	이 중 명	이 중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중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해 숙
전 회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욱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윤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희			

○속개 시 재석 의원(74인)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수	金 成 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한 표	김 현 권
노 응 래	도 종 환	박 남 춘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용 진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흥 근	백 재 현
서 형 수	소 병 훈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심 재 권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원 혜 영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원 욱
이 장 우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혜 훈
인 재 근	장 석 춘	전 희 경	정 동 영
정 유 섭	조 경 태	조 배 숙	주 광 덕
채 이 배	최경환(국)	최 윤 열	표 창 원
홍 의 락	홍 철 호		

○산회 시 재석 의원(93인)

강 석 진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훈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민 흥 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찬 우	백 재 현
백 해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손 해 원
송 기 석	송 석 준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상 호
원 혜 영	위 성 곤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만 회	이 상 돈
이 양 수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중 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학 재	임 이 자	전 현 희

정갑윤 정동영 정세균 정유섭
 정진석 정태욱 조승래 조원진
 진선미 최도자 최연혜 홍문표
 홍영표

○출장 의원(1인)

박지원

○청가 의원(5인)

강효상 나경원 손금주 이재정
 이종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우윤근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김현웅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환경부장관 조경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심재철

9월 12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6. 9. 1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추미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016. 9. 13.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이재정	.		
외교통일	.	추미애		
안전행정	박주민	이재정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	추혜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외교통일	추혜선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미래일자리 특별	윤영석	추경호	새누리당	2016. 9. 13.

○의안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

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
 추혜선·이철희·송기현·강병원·박선숙·
 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
 김관영 의원 발의)

9월 8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최도자·정인화·김중로·윤소하·
 주승용·윤영일·김종희·최경환(국)·김삼화·
 김해영·전혜숙·채이배 의원 발의)

9월 8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9. 7. 신경민·이찬열·안규백·인재근·
 장정숙·백혜련·위성곤·전혜숙·김종희·
 김해영·민홍철·김성수·박남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신경민·이찬열·안규백·인재근·
 장정숙·백혜련·위성곤·전혜숙·김종희·
 김해영·민홍철·김성수·박남춘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
 발의)

(2016. 9. 7. 최명길·이원욱·윤호중·박용진·
 김경협·백혜련·노웅래·김성수·김두관·
 김영진·한정애·고용진·박재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유승희·강창일·이상민·인재근·
 금태섭·기동민·설훈·윤호중·황주홍·
 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해영·
 노웅래·손혜원·어기구·윤후덕·이찬열·
 임종성 의원 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최명길·이원욱·윤호중·박용진·
 김경협·백혜련·김병관·노웅래·김두관·
 김영진·한정애·고용진·손혜원·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정용기 · 김광립 · 위성곤 · 광상도 · 최도자 · 민홍철 · 이은권 · 김정재 · 윤종필 · 정우택 · 김삼화 의원 발의)

9월 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김상희 · 이연주 · 윤소하 · 이학영 · 박홍근 · 이춘석 · 표창원 · 기동민 · 전해철 · 서영교 · 김영진 · 양승조 의원 발의)

9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소병훈 · 김병욱 · 김종희 · 서영교 · 백혜련 · 박재호 · 황주홍 · 신창현 · 김삼화 · 조배숙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오제세 · 유승희 · 김부겸 · 박남춘 · 김철민 · 인재근 · 김경진 · 최도자 · 김종희 · 신창현 · 황주홍 · 심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이정미 · 김종대 ·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김해영 · 어기구 · 김민기 · 황주홍 · 윤관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이정미 · 김종대 ·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어기구 · 김민기 · 황주홍 · 윤관석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어기구 · 박정 · 홍익표 · 김경우 · 신창현 · 전재수 · 김병욱 · 유승희 · 노웅래 · 김상희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2016. 9. 7. 이상호 · 박지원 · 노회찬 의원 외 159인 요구)

9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신상진 · 김경진 · 박성중 · 박찬우 · 이명수 · 이완영 · 이우현 · 정갑윤 · 주호영 · 함진규 의원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정성호 · 서영교 · 전해숙 · 백혜련 · 윤관석 · 민홍철 · 위성곤 · 임종성 · 이찬열 · 신창현 · 어기구 · 전해철 · 박남춘 의원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황주홍 · 이찬열 · 윤영일 · 유성엽 · 이춘석 · 최경환(국) · 김종희 · 김동철 · 김광수 · 백재현 · 김삼화 · 정인화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황주홍 · 이찬열 · 윤영일 · 유성엽 · 이춘석 · 최경환(국) · 김종희 · 김동철 · 김삼화 · 정인화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황주홍 · 이찬열 · 윤영일 · 유성엽 · 이춘석 · 최경환(국) · 김종희 · 김동철 · 김삼화 ·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강효상 · 김상훈 · 안상수 · 유민봉 · 박대출 · 이진복 · 배덕광 · 윤한홍 · 장석춘 · 윤재옥 · 임이자 · 김진태 · 신보라 · 김규환 · 최교일 · 김성원 · 조훈현 · 정유섭 · 민경욱 · 김현아 · 최운열 의원 발의)

9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박정 · 유동수 · 윤후덕 · 김한정 · 안민석 · 박경미 · 김성수 · 최운열 · 권철승 · 어기구 · 문미옥 · 김철민 · 소병훈 · 유은혜 · 송기현 · 이인영 · 안호영 · 기동민 · 김종민 · 정재호 의원 발의)

9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윤재옥 · 유재중 · 이만희 · 김성원 · 김규환 · 박덕흠 · 이우현 · 박대출 · 홍철호 · 이철규 · 곽대훈 · 김석기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김성태 · 박순자 · 이종명 · 임이자 · 유민봉 · 윤종필 · 조훈현 · 김상훈 · 강효상 · 정운천 · 정태옥 · 원유철 · 김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제해항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황주홍 · 이찬열 · 김종희 · 윤영일 ·

유성엽 · 이춘석 · 경대수 · 이개호 · 최경환(국) · 김동철 · 정인화 · 김광수 · 백재현 · 김대흠 · 이양수 · 김삼화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김상희 · 이연주 · 윤소하 · 이학영 · 박홍근 · 이춘석 · 표창원 · 기동민 · 위성곤 · 양승조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9. 8. 박인숙 · 김도읍 · 김상훈 · 이현재 · 김명연 · 김성원 · 김승희 · 윤종필 · 김성태 · 이명수 의원 발의)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신경민 · 인재근 · 전해숙 · 윤후덕 · 김해영 · 김종민 · 진선미 · 안규백 · 손혜원 · 정인화 · 정재호 · 김관영 · 박남춘 · 김정우 · 백혜련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황주홍 · 김현미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신경민 · 인재근 · 전해숙 · 윤후덕 · 김해영 · 김종민 · 진선미 · 안규백 · 정인화 · 정재호 · 김관영 · 박남춘 · 김정우 · 백혜련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황주홍 · 김현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정동영 · 박주현 · 심상정 · 윤소하 · 김경진 · 정성호 · 강창일 · 김종희 · 권미혁 · 윤영일 · 주승용 · 노회찬 · 오제세 · 윤후덕 · 김병욱 · 최경환(국) · 신용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임종성 · 안호영 · 정성호 · 김병욱 · 노웅래 · 박주민 · 윤관석 · 민홍철 · 안규백 · 전현희 · 유승희 · 윤영일 · 이원욱 · 윤후덕 · 김경협 · 정인화 · 김성원 · 이명수 · 김정우 · 남인순 의원 발의)

9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김종훈 · 정동영 · 백혜련 · 서영교 의원 발의)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이원욱 · 전해숙 · 위성곤 · 권칠승 · 민병두 · 김상희 · 김정우 · 최명길 · 안규백 · 신경민 · 유동수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9.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배덕광 · 지상욱 · 조경태 · 박맹우 · 윤한홍 · 박완수 · 박성중 · 정태욱 · 박정 · 이종배 · 윤종필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주광덕 · 정성호 · 황주홍 · 김세연 · 박완수 · 윤상직 · 유재중 · 김성태 · 성일중 · 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9. 9. 주승용 · 이개호 · 김경진 · 이용호 · 최도자 · 이용주 · 김관영 · 박준영 · 강창일 · 정동영 · 윤영일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신용현 · 권은희 · 김광수 · 김삼화 · 김중로 · 손금주 · 송기석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채이배 · 최경환(국)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박홍근 · 김해영 · 변재일 · 이인영 · 이용득 · 신경민 · 윤종오 · 문미옥 · 최명길 · 추혜선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9. 9. 신용현 · 권은희 · 김광수 · 김삼화 · 김중로 · 손금주 · 송기석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채이배 · 최경환(국)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이원욱 · 전해숙 · 이학영 · 박용진 · 표창원 · 안규백 · 최명길 · 김정우 · 신경민 · 유동수 · 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2016. 9. 9. 정부 제출)

9월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박병석 · 이인영 · 김종대 · 김관영 · 오제세 · 정성호 · 신창현 · 노웅래 · 서영교 · 안규백 · 추미애 · 김해영 · 어기구 · 문미옥 · 이찬열 · 전해숙 · 박찬대 · 김정우 · 심재권 의원 발의)

9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백재현 · 안규백 · 김종민 · 서영교 · 김해영 · 김정우 · 민병두 · 이찬열 · 박경미 · 표창원 · 전해숙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경대수 · 최교일 · 정우택 · 김정재 · 김진태 · 김승희 · 박덕흠 · 김도읍 · 여상규 · 권성동 · 최연혜 · 김영우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윤관석 · 조배숙 · 추혜선 · 윤소하 · 최도자 · 이정미 · 윤후덕 · 서영교 · 노웅래 · 김상희 · 김정우 · 유동수 · 어기구 · 이찬열 · 박남춘 · 김성수 · 표창원 · 오제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경대수 · 최교일 · 정우택 · 김정재 · 김진태 · 김승희 · 박덕흠 · 김도읍 · 여상규 · 권성동 · 최연혜 ·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김종희 · 김광수 · 이찬열 · 양승조 · 정동영 · 황주홍 · 김병욱 · 최경환(국) · 유성엽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김종희 · 김광수 · 이찬열 · 양승조 · 정인화 · 황주홍 · 김병욱 · 최경환(국) · 유성엽 · 윤영일 · 박준영 · 김경진 · 이태규 의원 발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김종희 · 김광수 · 이찬열 · 양승조 · 정인화 · 황주홍 · 김병욱 · 최경환(국) · 유성엽 · 윤영일 · 박준영 · 김경진 · 이태규 의원 발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경대수 · 엄용수 · 이종명 · 이명수 · 김성찬 · 김종석 · 이종배 · 정태욱 · 문진국 · 이철우 의원 발의)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경대수 · 이종명 · 이명수 · 김성찬 · 김종석 · 이종배 · 정태욱 · 문진국 · 이철우 · 김정재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경대수 · 이종명 · 이명수 · 김성찬 · 김종석 · 이종배 · 정태욱 · 문진국 · 이철우 · 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김종희 · 김광수 · 채이배 · 이찬열 · 양승조 · 정동영 · 정인화 · 황주홍 · 김병욱 · 최경환(국) · 유성엽 · 이동섭 · 윤영일 · 박준영 · 김경진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오신환 · 민경욱 · 정갑윤 · 최연혜 · 전희경 · 김성원 · 성일종 · 정태욱 · 이만희 · 김정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김상훈 · 김명연 · 박인숙 · 성일종 · 김승희 · 김순례 · 강석진 · 윤종필 · 유민봉 · 유승민 · 민경욱 의원 발의)

이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김철민 · 안민석 · 박남춘 · 민병두 · 김태년 · 이연주 · 전해철 · 오제세 · 이개호 · 황주홍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이석현 · 손혜원 · 이춘석 · 박광운 · 김해영 · 임종성 · 김민기 · 윤후덕 · 전해숙 · 백재현 · 심재권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정춘숙 · 김철민 · 박용진 · 김해영 · 박남춘 · 전해숙 · 서영교 · 권미혁 · 금태섭 · 김경진 · 김병욱 · 신창현 · 양승조 · 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정춘숙 · 김철민 · 김해영 · 박남춘 · 전해숙 · 권미혁 · 금태섭 · 김경진 · 신창현 · 양승조 · 남인순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9. 정부 제출)

이상 8건 9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신용현 · 권은희 · 김광수 · 김삼화 · 김중로 · 손금주 · 송기석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채이배 · 최경환(국)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신용현 · 권은희 · 김광수 · 김삼화 · 김중로 · 손금주 · 송기석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채이배 · 최경환(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윤관석 · 이찬열 · 위성곤 · 윤후덕 · 서영교 · 안규백 · 김병욱 · 정유섭 · 문진국 · 인재근 · 김세연 · 신상진 · 민홍철 · 박남춘 · 김정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박완수 · 주호영 · 정갑윤 · 정병국 · 김성원 · 이학재 · 김삼화 · 김성태 · 신상진 · 박덕흠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이우현 · 이학재 · 김현아 · 주호영 · 박대출 · 박맹우 · 이장우 · 박덕흠 · 김선동 · 신상진 · 홍철호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이학재 · 박명재 · 홍철호 · 김성태 · 정성호 · 최경환(국) · 김도읍 · 엄용수 · 윤상현 · 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민병두 · 신창현 · 진선미 · 정성호 · 오제세 · 박남춘 · 이찬열 · 남인순 · 신경민 · 김영춘 · 박용진 의원 발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천정배 · 박주현 · 송기석 · 정인화 · 윤영일 · 박준영 · 조배숙 · 장정숙 · 이동섭 · 김광수 · 채이배 · 김삼화 · 황주홍 · 김종희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김성찬 · 윤한홍 · 이명수 · 경대수 · 이종명 · 강효상 · 박완수 · 홍문중 · 김정훈 · 김태흠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진선미 · 박남춘 · 전해숙 · 서영교 · 홍익표 · 정성호 · 이정미 · 박홍근 · 이인영 · 정인화 · 오제세 · 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제윤경 · 윤종오 · 박남춘 · 서영교 · 정성호 · 박용진 · 유승희 · 위성곤 · 김삼화 · 김현미 · 전해숙 · 백혜련 · 김영춘 · 윤관석 · 임종성 · 소병훈 · 김철민 · 이정미 · 김정우 의원 발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제윤경 · 정성호 · 박용진 · 위성곤 · 임종성 · 김현미 · 김관영 · 안규백 · 유승희 · 박홍근 · 백혜련 · 김정우 · 김해영 · 박찬대 · 원혜영 · 조승래 · 정재호 · 전해철 · 박남춘 · 최운열 · 박경미 · 박광온 · 민병두 · 김철민 · 이해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추경호 · 주광덕 · 정운천 · 이은권 · 송석준 · 장석준 · 윤상직 · 민경욱 · 궤대훈 · 이현재 · 이철규 · 이채익 · 최교일 · 엄용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2. 추경호 · 주광덕 · 정운천 · 이은권 · 송석준 · 장석춘 · 윤상직 · 민경옥 · 광대훈 · 이현재 · 이철규 · 이채익 · 최교일 · 엄용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2. 김현미 · 진선미 · 김종민 · 민병두 · 김해영 · 민홍철 · 김관영 · 추혜선 · 윤소하 · 윤후덕 · 김중희 · 최경환(국) · 위성곤 · 김정우 · 정성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2. 이명수 · 이현재 · 홍문표 · 임이자 · 윤종필 · 경대수 · 장석춘 · 정태옥 · 박찬우 · 지상욱 · 유기준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12. 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노웅래 · 김민기 · 윤관석 · 조승래 · 오영훈 · 주승용 · 장정숙 · 전해숙 · 박홍근 · 최명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천정배 · 박주현 · 송기석 · 정인화 · 윤영일 · 조배숙 · 박준영 · 장정숙 · 채이배 · 김삼화 · 이상돈 · 김중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박광온 · 김해영 · 권칠승 · 이찬열 · 문미옥 · 백혜련 · 신경민 · 서영교 · 추미애 · 김현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김현미 · 김관영 · 김정우 · 김종민 · 김중희 · 김해영 · 민병두 · 민홍철 · 박남춘 · 위성곤 · 윤후덕 · 정성호 · 진선미 · 최경환(국) · 추혜선 의원 발의)

이상 9건 9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최도자 · 윤소하 · 윤영일 · 박주선 · 강창일 · 조배숙 · 정성호 · 김삼화 · 황주홍 · 김광수 · 김관영 · 신용현 · 남인순 · 주승용 · 이용주 · 김영춘 의원 발의)

9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장제원 · 이채익 · 문진국 · 김재경 · 홍문종 · 이양수 · 정갑윤 · 주호영 · 강길부 · 윤종필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2. 장제원 · 강석호 · 박순자 · 김학용 · 홍철호 · 조경태 · 이채익 · 정갑윤 · 강길부 · 송희경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장제원 · 강석호 · 박순자 · 김학용 · 홍철호 · 조경태 · 이채익 · 정갑윤 · 강길부 · 송희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장정숙 · 주승용 · 신경민 · 김병기 · 신용현 · 김중로 · 천정배 · 김관영 · 김삼화 · 홍영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심재철 · 조경태 · 홍철호 · 김명연 · 이종명 · 박인숙 · 오신환 · 주호영 · 권석창 · 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유기준 · 이종명 · 정갑윤 · 이은권 · 김성원 · 박명재 · 정유섭 · 민홍철 · 김도읍 · 김중희 · 유재중 · 윤상직 · 장석춘 · 박대출 · 조경태 · 여상규 · 김성찬 · 함진규 · 이명수 · 김승희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2. 윤소하 · 김종훈 · 박선숙 · 어기구 · 김정우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황주홍 · 김종대 · 이개호 · 위성곤 · 김관영 · 인재근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김성찬 · 홍문종 · 위성곤 · 이주영 · 황주홍 · 유기준 · 정인화 · 광대훈 · 김한표 · 김태흠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이명수 · 박명재 · 홍문표 · 임이자 · 윤종필 · 정태옥 · 장석춘 · 박찬우 · 지상욱 · 유기준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조원진·유기준·유민봉·추경호·김성태·이현재·박완수·주호영·원유철·김석기 의원 발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이찬열·황주홍·홍익표·안민석·윤호중·유동수·박명재·어기구·박정·김병관·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노웅래·김민기·윤관석·조승래·오영훈·주승용·장정숙·전혜숙·박홍근·최명길 의원 발의)

9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이용득·김삼화·김정우·김해영·남인순·박남춘·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어기구·이인영·추미애 의원 발의)

9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주광덕·김삼화·김성태·황주홍·박완수·윤상직·유재중·성일종·정운천·김정재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김경수·김영진·김정우·박경미·서형수·송기현·신창현·오제세·윤관석·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 9. 12.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 9. 12. 국방위원장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권성동·유재중·경대수·김영우·이종명·정갑윤·박명재·성일종·유의동·김상훈 의원 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나경원·이종명·김도읍·염동열·金成泰·곽대훈·전희경·강효상·원유철·배덕광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황주홍·윤영일·최경환(국)·백재현·전혜숙·이찬열·김종희·이정미·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

9월 19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염동열·민홍철·김성태·고용진·김명연·황영철·김진태·문진국·장석춘·박대출 의원 발의)

9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나경원·이종명·김도읍·황주홍·염동열·金成泰·곽대훈·전희경·강효상·원유철 의원 발의)

9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심재권·이용주·박홍근·정성호·인재근·권미혁·윤후덕·김병관·황주홍·신창현·김경협·강창일·설훈·서형수·박남춘·노웅래·윤종오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김정우·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박정·김경진·서영교·김해영·손혜원·김병욱·백혜련·위성곤·윤관석·황주홍·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박정·김경진·서영교·김해영·손혜원·김병욱·백혜련·위성곤·윤관석·황주홍·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지상욱·정태욱·김성원·이혜훈·김종석·김선동·엄용수·최교일·김한표·

추경호 · 유의동 · 이현재 · 조정식 · 신상진 · 정성호 · 김성태 · 이명수 · 유승민 · 박인숙 · 손금주 · 황영철 · 김한정 · 성일종 · 박덕흠 · 이개호 · 송석준 · 이양수 · 이종명 · 김순례 · 이종배 · 신보라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황주홍 · 윤영일 · 최경환(국) · 백재현 · 전해숙 · 이찬열 · 김중희 · 이정미 · 김삼화 ·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오영훈 · 이원욱 · 강창일 · 백혜련 · 위성곤 · 손혜원 · 안규백 · 송기현 · 유동수 · 김상희 · 박경미 · 홍문표 · 조승래 · 노웅래 · 안민석 · 표창원 의원 발의)

9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황주홍 · 최경환(국) · 백재현 · 전해숙 · 이찬열 · 이정미 · 강창일 · 정인화 · 김경진 · 김삼화 · 주승용 · 노웅래 · 박주선 의원 발의)

9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박재호 · 표창원 · 이찬열 · 우원식 · 전재수 · 최인호 · 이훈 · 최도자 · 추혜선 · 송기현 · 김두관 · 유동수 · 홍익표 · 이원욱 · 최운열 · 이용득 · 윤소하 · 김해영 · 윤호중 · 어기구 · 문미옥 · 조배숙 · 안민석 · 노웅래 · 윤후덕 · 조승래 · 서형수 · 정재호 · 이철희 · 유은혜 · 소병훈 · 김철민 · 백혜련 · 서영교 · 김상희 · 김부겸 · 신창현 · 오제세 · 박경미 · 송옥주 · 김성수 · 홍영표 · 전해숙 · 제윤경 의원 발의)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박재호 · 표창원 · 이찬열 · 우원식 · 전재수 · 최인호 · 이훈 · 최도자 · 윤소하 · 추혜선 · 송기현 · 김두관 · 유동수 · 홍익표 · 이원욱 · 최운열 · 이용득 · 김해영 · 윤호중 · 강훈식 · 어기구 · 문미옥 · 조배숙 · 안민석 ·

노웅래 · 윤후덕 · 조승래 · 서형수 · 정재호 · 이철희 · 유은혜 · 소병훈 · 김철민 · 백혜련 · 서영교 · 김상희 · 김부겸 · 신창현 · 오제세 · 박경미 · 김성수 · 홍영표 · 전해숙 · 제윤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박주민 · 권미혁 · 황주홍 · 김경진 · 박홍근 · 손혜원 · 박남춘 · 신창현 · 남인순 · 정춘숙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정병국 · 황영철 · 박명재 · 박덕흠 · 조훈현 · 김성태 · 조원진 · 정운천 · 김정재 · 홍철호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정병국 · 황영철 · 박명재 · 박덕흠 · 조훈현 · 김성태 · 조원진 · 정운천 · 김정재 · 홍철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우현 · 김성원 · 이완영 · 김태흠 · 박덕흠 · 박대출 · 박맹우 · 김선동 · 이장우 · 박찬우 · 홍철호 의원 발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6. 9. 19.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윤호중 · 윤관석 · 이찬열 · 김해영 · 박주민 · 이학영 · 최인호 · 신경민 · 권칠승 · 원혜영 · 김상희 · 남인순 · 김종민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정갑윤 · 신보라 · 김성태 · 김명연 · 문진국 · 박대출 · 김정재 · 정성호 · 이철우 · 권성동 · 박맹우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정갑윤 · 신보라 · 윤한홍 · 김성태 · 김명연 · 문진국 · 박대출 · 김정재 · 정성호 · 이철우 · 권성동 · 박맹우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한정애 · 인재근 · 서형수 · 송옥주 · 진선미 · 권칠승 · 고용진 · 강병원 · 강훈식 · 이찬열 · 홍의락 · 이용득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개호·위성곤·정인화·민홍철·박광온·조정식·노웅래·한정애·손혜원·박정·주승용·인재근·김철민·윤영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전해철·안호영·박남춘·유승희·윤후덕·김철민·황희·남인순·백재현·권철승·이원욱·박주민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혜영·임종성·이언주·김민기·윤후덕·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개호·위성곤·이찬열·주승용·김철민·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박광온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혜영·노웅래·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혜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백재현·전혜숙·심재권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혜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김철민·이언주·오세정·정성호·윤소하·전해철·전혜숙·박남춘·김현미·박주민·추미애·김정우·최경환(국) 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남인순·박남춘·이학영·김종민·김혜영·이정미·추혜선·진선미·이해찬·위성곤·신창현·김현미 의원 발의)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2016. 9. 19. 정동영·안철수·김종회·박지원·주승용·오세정·전현희·정운천·유성엽·신용현·조배숙·박주현·장병완·채이배·

김병욱·권은희·김성식·최경환(국)·이동섭·손금주·안호영·김수민·이해찬·이우현·김삼화·김현아·박준영·김종태·이상돈·김경진·이용호·최도자·김광수·심상정·이용주·윤영일·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최경환(국)·권은희·기동민·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정우·김종회·김한정·민병두·박남춘·박준영·서영교·손금주·송기석·신용현·오세정·윤영일·이동섭·인재근·장정숙·주승용·채이배·추혜선 의원 발의)

이상 2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2016. 7. 14. 김동철·박지원·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식·김종회·김중로·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신용현·윤영일·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요구)

9월 8일 요구자 철회 요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8. 31. 서영교·진선미·김종훈·정재호·박광온·박남춘·김종태·김혜영·정성호·김정우·최경환(국)·박정 의원 발의)

9월 8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2016. 7. 6. 이장우·홍문종·유재중·지상욱·박덕흠·하태경·이은재·이종배·염동열·김석기·김순례·김승희·황영철·홍철호·이우현·김명연·김정재·함진규·한선교·조원진·박순자·최연혜·김태흠 의원 요구)

9월 8일 요구자 철회 요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8. 25. 박광온·김혜영·추미애·권철승·문미옥·이찬열·백혜련·김현미·신경민·서영교 의원 발의)

9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윤호중·이찬열·신경민·이학영·김상희·윤관석·최인호·김혜영·박주민·

김종민 · 원혜영 · 남인순 · 권칠승 의원 발의)
9월 1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

(2016. 9. 9. 최영희 외 22,359인으로부터 김삼화 ·
남인순 · 이원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금강에프엠방송)에
관한 청원**

(2016. 9. 9. 금강에프엠방송 대표 김광육 외
59인으로부터 이해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금융정책 등에 관한 질문서

대규모유통업 등에 관한 질문서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센터에 관한 질문서

상이등급 체제에 관한 질문서

(이상 4건 2016. 9. 9. 박선숙 의원 제출)

**울주군청과 울산원예농협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허위서류 작성 제출과 관련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16. 9. 12. 유동수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울주군청과 울산원예농협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허위서류 작성 제출과 관련한 질문서**

(2016. 9. 12. 유동수 의원 제출)

9월 13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지역아동센터 현안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6. 9. 7. 정부 제출)

**‘201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환경구축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에 관한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서**

(2016. 9. 8. 조달청장 제출)

**울산원예농협 비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2016. 9. 12.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2016. 9. 8. 정부 제출)

9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